

# 주민 공감대 형성·자본 유치...사업 추진 속도 내야

## 해 넘기는 광주·전남 현안 어떻게 풀어야 하나

광주시와 전남도가 올해 해결하지 못한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책임감 있는 행정력과 주민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다. 특히 장기간 경기 침체 속에서 수천억원대의 예산 확보와 민자를 유치해야 하는 점 등 산적한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광주시, 적극적 주민 설득 필요=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과 면세점 포함 된 특급호텔 건립 등 해묵은 현안사업이 걸리고 있는 것은 지역 일부 상인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기조 탓에 광주시와 민간기업들이 눈치를 보고 있

는 형국이다.

광주시는 민간투자자 공모를 올해 내에 진행할 계획이지만 기업의 반응은 냉담하다. 애초 알려졌다 것보다 판매시설 규모가 대폭 축소돼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신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특급호텔 건립도 비슷한 이유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신세계 측은 올 초 광주시의 특급호텔 복합시설 지구단위계획 보완 요청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역 일부 상인들이 특급호텔에 들어서는 상업시설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어등산 개발·특급호텔 건립 지역 상인과 상생 방안 찾아야 흑산공항 환경훼손 최소화 관건 시·도 갈등 해소 행정력 집중

광주군공항 문제도 공감대 형성이 가장 큰 과제다. 광주시는 현재 용역 등을 통해 후보지를 2~3곳으로 압축하고 가장 적합한 지역도 찾아냈지만 해당 지역민 반발 등을 우려해 공개를 하진 않고 있다. 이 문제는 비단, 광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광주와 전남이 상생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내년 가장 큰 현안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이다.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도 서희건설 컨소시엄과 코레일의 주차장 운영권 갈등을 해결해야 하고, 2400억원대에 이르는 민자투자가 제대로 이뤄질지 여부 등도 변수다.

◇전남도, 환경보존 방안 마련해야=흑산공항 건설은 환경단체에 의해 발목이 잡혀있다. '개발' 대 '보존'의 대표적 갈등 사례다.

흑산도는 연간 30여만명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을 이용해 왕래하고 있으나 결항률이 13%에 이르러 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흑산공항은 2020년까지 토지 보상비와 공사비 등 총비 1833억원을 들여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에 1200m 활주로의 부대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소형공항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자연환경 훼손과 희귀조류·철새 보호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환경부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보호를 명분으로 지난 7월 개발계획 재보완을 요구했다. 조류의 항공기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한차례 보완을 요구했다.

흑산공항 건설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돼 이미 예산이 반영됐다.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은 전남 수산업 경쟁력 확보와 중국 등 세계 시장을 겨냥한 수출 전진기지다.

전남은 전국 어업 생산량의 47.3%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어업 생산지다. 부산·울산·경남의 35.6% 보다 높다.

하지만 전남의 가공산업 점유율은 18%로, 경남권의 36%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대중국 수출 수산품목의 80%를 차지하는 조미 김의 원료인 물김을 전남에서 76% 생산하는데 가공은 타지역에서 이뤄져 수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산업이 취약해 전남 수산 관련 업체들은 영세한 실정이다.

국내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서둘러 수산식품수출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통합찬반 전당원투표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나쁜투표 거부운동본부' 소속 통합반대파 국민의당 의원과 당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원 투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전당원 투표 세몰이 두 동강 난 국민의당

### 安 “내년 2월까지 통합” 중단 가치분신청 반대파 투표 실력저지 등 나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묻는 전(全)당원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국민의당에는 전원이 고조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 진영으로 나뉘어 여론 고공전과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졌다. 특히 반대파가 전당원투표의 적법성을 문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통합에 대한 당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안철수 대표 측은 전당원투표로 당내 통합 논쟁에 종지부를 찍자며 당위성을 거듭 호소하는 가운데, 합당 완료 시점을 내년 2월로 제시하면서 통합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반대파는 투표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이콧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출연,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아이없는 주장”이라며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 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통합이 되더라도 저는 백의종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바른정당과의 합당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만약 내년 1월부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한

달 조금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당 절차와 관련한 실무검토에 이미 착수했음을 시사했다.

안 대표는 27일 바른정당 지역위원회 주최 행사에 참석하며 통합 분위기를 띄우는 데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중도개혁통합을 위한 원외 지역위원회’와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잇따라 통합 지지를 선언하며 안 대표의 통합 드라이브에 힘을 실었다.

반면 반대파 측에서는 호남 중진들이 전면에서 나서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일방 당원들을 규합한 실력행사에도 착수하며 투표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전정배 전 대표는 c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당원투표는 ‘안철수 사당’의 요식행위로, 이를 백년 해방자 합당 결의와는 무관하다”면서 “저희는 그것에 승복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만약 당원 여러분께 재신임투표 전화가 오면 반드시 끊어달라”면서 보이콧 동참을 당부했다.

전날 법원에 투표중단 가치분신청을 제기한 반대파 모임 ‘나쁜투표 거부운동본부’에 참여한 전정배·박지원·정동영·유성엽·장병완·박준영·최경환·박주현·장성숙 등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대표가 위법·불법적으로 추진하는 전당원투표를 거부해 보수야합을 분쇄하겠다”고 천명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 황주홍 가세... 국민의당 통합 투표 찬성 광주·전남 의원 5명으로 늘어

### 권은희·송기석 의원 “통합 의결되면 신당에도 참여”

황주홍 의원이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연계한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 실시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황 의원은 26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당원 투표 금지 가치분 신청에 대해 참여의사를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았는데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며 “전당원 투표 실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 전당원

투표에 찬성하는 의원은 주승용, 송기석, 권은희, 손금주, 황주홍 의원 등 5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전당원 투표를 찬성하는 의원들의 고민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전당원 투표’ 실시와 관련, 지역구 국민의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구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

는 것이다.

전남지역 국민의당 광역의원은 “현역 국회의원들은 총선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통합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년 지방선거가 목전”이라며 “지역구 의원이 전당원 투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여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당원 투표 찬성 입장을 나타낸 지역 의원들 가운데 권은희, 송기석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통합이 의결된다면 신당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주승용, 황주홍, 손금주 의원 등은 “분열은 공멸”이라고 밝혀 통합 신당 참여 여부에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주 의원은 “분열적 통합은 모순”이라며 “바른정당이 보다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 호남 민심을 설득하지 않고는 통합의 길이 없다”고 말했다. 황 의원도 “파국을 막기 위해 중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통합 정당 참여 여부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제고
-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 지방분권 개헌 지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www.clad.go.kr

